전북특자도 특별법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 · 육성 특례'

글로벌 친환경 산악관광지 조성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살펴보는 차원에서 농생명산업분야 특례, 청정에너지 산업 진흥 특례, K-팝 국제교육도시 특례 등에 이어 이번에는 미래 관광 산업 육성의 기반인 '친환경 산악관광 특구 지정·육성' 특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 거쳐 특구 지정
산림규제 개선 등 산악관광 고부가가치 산업 추진

전북특별자치도 핵심 특례 중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육성 특례는 '전북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해 휴양·관광·레포츠를 포괄하는 통합관광지 조성으로 관광시장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개발이 제한된 동부권을 산악관광지로 개발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한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산림훼손은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으로 산림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 제도 기반이 필요하므로 전북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과 기본계획 수립,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제75조~제85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북의 지역 실정에 맞는 산지관리 및 지역특화 자연 휴양림 지정에 대한 권한도(제86조~제88조) 담고 있다.

먼저,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 특례는(제75조)는 도지사가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을 가능하게 하고,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방법·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해 지역현황에 맞는 산악관광특구 조성을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산악관광자원과 잠재력이 풍부한 우리 지역을 산악관광특구로 지정하고, 자연친화적으로 개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 산악관광 진흥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산악관광특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산악관광특구 활용에 대한 기본계획(제76조)과 친환경 산악관광특구가 지정되면 산악관광특구 기본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정·수립·승인·변경·폐지 및 구역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도록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의 효과(제77조)도 특례에 담았다.

친환경산악관광특구 시행자의 지정(제78조)특례,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제79조)특례는 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새로운 시행자를 대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산악관광특구의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제83조)는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의 절차,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전라북도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글로벌 산악관광지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친환경 산악관광특구의 조세·부담금 특례(제84조)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실제 사업을 추진할 민간투자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도모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높이고자 한다.

아울러, 친환경 산악관광특구의 기반시설 설치 등 지원(제85조)은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산지관리법 적용은(제86조) 산악관광특구 내(국유림 제외, 이양된 권한에 한정) 보전산지의 해제와 전용허가, 일시사용허가·신고 등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 산림정책 추진에 탄력과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특례다.

민선식 전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전북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산악관광지구 조성으로 관광시장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더 잘사는 전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며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육성 특례들이 통과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국회,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찬성 149 · 반대 136표
민주, 고착화된 '방탄 정당' 이미지 해소 계기 될 듯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요청에 따른 역풍으로 비이재명(비명)계가 무더기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어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다. 또 친명과 비명계 간 갈등이 확산되면서 민주당 내홍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29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중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번 표결은 투표한 295명 가운데 148명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 문턱을 넘는다. 표결 결과 과반을 2표차로 턱걸이로 넘어섰다.

국민의힘(110명·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 제외), 여권 성향 무소속(2명), 정의당(6명), 한국의희망(1명), 시대전환(1명)이 모두 가결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에서 28명만 이탈해도 가결정족수를 채우는 상황이었다.

찬성표가 149표가 나옴에 따라 민주당에서 29명이 이탈해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입원 중인 이 대표를 제외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 대표가 지난달 31일부터 장기간 단식을 이어오자 당내에서도 동정론이 일어나면서 부결에 힘이 실렸다. 민주당은 재적 298석 중 167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예상과 달리 반대표는 민주당 의석 수에 크게 못 미치는 136표에 그쳤다.

이날 표결 결과는 지난 2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와 유사하다.

지난 2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최소 30명이 넘는 대규모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면서 당내 내홍으로 이어진 바 있다.

이 대표가 전날 부결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낸 것이 역효과를 불러온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시켜 달라는 의사를 전했다.

장기간 단식으로 병원에 누워있는 이 대표가 부결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상반되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향후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또한 비이재명계가 사실상 무더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면서 계파 갈등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 이 대표, 자당 출신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을 연달아 부결시키며 고착화된 '방탄 정당' 이미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8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해 구속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뉴시스

도내외 기업·농생명기관·대학과 K푸드테크 글로벌 선도

전북도,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 출범… 대체식품 · 스마트 제조 분야 특화 협업 네트워크로 시너지 창출

농생명 산·학·연·관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푸드테크 미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가 첫발을 내디뎠다.

전북도는 21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도내외 푸드테크 관련 기업, 연구·지원기관, 대학, 투자자문사 등으로 구성된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 각 기관·기업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해 최근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푸드테크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이하 얼라이언스)는 푸드테크 분야 산·학·연·관 간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협의체로 여기서 '42'라는 숫자는 테크부문 기술혁신을 상징한다.

21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전라북도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 출범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도내 농생명 관련 국가기관, 스마트 제조, 대체식품 기업등 참석자들이 참여의향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얼라이언스는 기업, 농생명 기관, 대학, 행정 간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소비자(도시, 대기업 등)의 당면과제를 생산자(지역, 혁신기업)의 자원, 아이디어, 연구개발(R&D) 등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푸드테크 분야 중에서도 대체식품과 스마트제조 부문을 중점적으로 특화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구체적 현안 논의를 위해 지속가능한 푸드를 목표로 '대체식품(SF, Sustainable Foods)그룹', 디지털전환을 목표로 '스마트제조(DX, Digital Transformation) 그룹' 두 개로 운영될 예정이다.

구성의 면면을 보면 스마트 제조분야에 SK 네트웍스서비스, KT, 두산로보틱스, 팜조아, 두손푸드가 참여하며, 대체식품 분야는 CJ, 롯데중앙연구소, 풀무원, 리하베스트, 그린팜아그로, 네오크레마, 239바이오, 수지스링크 등으로 꾸려 도내외 기업을 망라한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에 중점을 뒀다.

연구개발(R&D) 기관으로는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푸드테크협의회, 캠틱종합기술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북본부가 참여하며, 지원기관으로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참여한다.

대학은 푸드테크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사업을 맡고 있는 원광대학교가 참여한다.

추후, 투자자문을 위해서 벤처투자사인 소풍벤처스도 합류한다.

도는 향후 케이(K)-푸드테크의 글로벌 선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룹별 회의를 통해 2042년까지 20개 이상의 대체식품, 스마트 제조 분야 해결과제를 발굴하고, 푸드테크 세미나 등을 통해 기술, 성과 등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은 50여개 농생명 혁신기관과 1,800여명의 박사급 인력이 모여 있어 푸드테크를 비롯한 농생명산업에 있어서는 최적지"라며 "K푸드테크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혁신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를 매개체로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국회, 한덕수 해임건의안 가결

총리 해임안, 헌정사상 첫 가결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헌정사상 첫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처리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총투표수 295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10·29 이태원 참사, 잼버리 사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제안설명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자행된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총리가 있었다"며 "무책임한 내각 운영으로 민생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도 국정운영의 퇴행을 막고 총체적 난맥을 바로잡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며 "내각이 정신 차리라는 것이다. 한 총리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해 주기를 호소드린다"고 했다. /뉴시스

"동학혁명 참여자 인정 자격 배제는 이중잣대"

윤준병 의원, "보훈부 규탄"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정읍·고창, 국회 농해수위)가 21일,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 인정 근거를 담은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법' 개정안의 소위 통과 관련 국가보훈부 입장문에 대해 "독립유공 인정자격에 이중잣대를 들이대며, 도 넘은 사실왜곡을 하는 국가보훈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법안 의결에 국가보훈부는 20일 "보훈 관련 법안을 무시하고 형평성도 간과한 과도한 특혜를 주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 인정자격 부여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입장은 독립운동가인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으로 나타난 윤석열 정부의 왜곡된 역사관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라며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이중잣대와 사실 왜곡으로 참여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국가보훈부의 작태를 질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 서남권까지 균형발전 대상 지역 확대돼야"

김성수 도의원, '전북도 균형발전 대상지역 확대 성과 제고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1)은 21일 전라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균형발전의 대상 지역 확대와 성과 제고를 위한 의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신기현 전북대 명예교수가 맡았고, 전대성 전주대 교수가 '전라북도 균형발전의 대상 지역 확대와 성과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김성수 의원, 전용태 균형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성호 전라북도 정책기획관, 전영옥 군산대 교수, 김재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전라북도 균형발전의 대상 지역에 대한 확대 필요성과 성과 제고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발제를 맡은 전대성 교수는 "동부권 특별회계는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기념비적인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과 지역을 연계할 수 있는 거시적 접근, 전라북도 균형발전의 대상 지역 확대 필요성, 기반 고도화를 통한 질적 혁신과 이를 통한 양적 확대 추진, 청년 및 주민 선호에 맞는 맞춤형 사업 발굴,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등"을 제안했다.

이성호 도 정책기획관은 "전라북도 균형발전이 주민소득 개발사업 분야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서남권을 포함한 10개 시군이 인구소멸지역임을 감안하여 서남권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영옥 교수는 "낙후도 지수와 같은 기준을 개발하고, 공론화를 통해 이를 확정한 다음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효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전북도의 재원 조정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수 의원은 "전라북도 균형발전을 모색하고자 도의원, 전문가와 함께 토론회를 열었다"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연 300억원의 동부권 특별회계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 360억원으로 총 6,600억원의 재원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이 속한 서남권 역시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어 전북 균형발전의 대상 지역을 서남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전라북도 균형발전의 대상 지역 확대와 성과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진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는 21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11일부터 2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 된 제28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시작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특히,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5,996억원을 확정했으며, 4억1,000만원은 삭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